

DUCK'S NEWS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그림의 떡’ 오리농가, “빛 값을 길막막...엄두도 못내”



오리농가는 축사시설현대화가 가장 늦게 시작됐다. 하우스 형태의 노후화된 축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 현대화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탓에 다수의 오리농가들은 현대화를 하면서 계사를 짓고 있다. 빛을 값기에 오리사육은 수익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전북 정읍시 소성면에서 오리를 사육하던 김 철(57) 씨는 지난해 4월 출하를 끝으로 오리축사를 헐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사업비 중 30%를 지원받아 현대화사업을 시작했다. 1만1,000평에 계사를 짓는데 17억 원이 들었고 보조금을 뺀 자부담은 12억 원에 달한다.

결국 2010년 오리 사육을 시작한 김 철 씨는 축사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양계로 눈을 돌려야 했다. 새끼오리를 출하할 때까지 새끼오리를 추가로 입식할 수 없는 ‘올인 올아웃’ 사육방식이 자리 잡으면서 이전에는 1년에 10회 이상 출하했던 오리를 많아야 6번, 시 때문에 휴지기를 가지면 고작 4번 출하 하다 보니 빛을 값고 생계를 잇기에는 수익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닭 고기가 아무리 생산 과잉이라도 수요가 부진한 오리고기보다는 시장 전망이 훨씬 좋다는 판단도 있었다.

김 씨는 “오리축사가 개선돼야 하는 것은 맞다. 그래야 시도 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하면 오리는 아무리 규모를 늘려도 빛을 값을 길이 보이지 않는다”며 “양계를 해도 앞으로 20년은 빛을 값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부터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전액 자부담으로 바뀌었지만 2017년과 2018년에는 가금에 한해 정부가 사업비의 30%를 지원해줬다. 하지만 ‘3,000만 원짜리 트랙터가 보조금을 받으니 4,500만 원짜리가 되더라’는 어느 보조사업과 마찬가지로 그만큼 비싼 건축비를 감당해야 했다. 국가 입찰시스템을



이용했지만 농가에게는 업체를 선택할 권리가 없었고 입찰과정에서 건축업체가 제시하는 금액이 비싸더라도 입찰이 되는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었다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김 씨는 "사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정부가 지원해주는 돈도 정부 돈이 아니라 FTA 피해보전 자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농민이 혜택을 봐야 하지만 부가세도 내야하고 입찰과정도 그렇고 보조금이 농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거죠"라고 말했다.

정읍 영원면에서 오리를 사육하는 박하담 정읍시농민회 사무국장은 "정읍에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하는 농가가 5~6곳이 있는데 모두 양계를 할 예정이다. 출하횟수도 적고, 같은 평수에 사육 가능한 마릿수도 적고 오리고기의 시장가격도 좋지 않으니 수익이 맞지 않는 것"이라며 "올해부터는 보조금도 없어졌지만 30%를 보조해줬다고 하더라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오리를 키우고 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인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리농가가 빚을 상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모든 오리농가들이 축사시설을 현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사무국장은 "무작정 보조금을 올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해야 할 농가에서 시가 발생하면 엄청난 국가재산이 투입되니 그 비용의 일부를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으로 활용한다면 선제적으로 질병을 막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제안하는 것이다. 투자비용(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아끼자고 위험부담(질병발생 등)을 떠안고 가는 형국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농정신문 [2019. 3. 18]

부안군, 구제역·AI 청정사수...강도높은 방역대책 마련

2

부안군은 구제역 및 AI와 같은 재난형 가축전염병을 막기 위해 부안군만의 특색 있고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부안스포츠파크 주변에 신축하고 있는 거점소독·세척시설이 오는 7월 중 준공되면 특별방역기간 외에도 상시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또 겨울철 오리나 양계농가에 대해 휴지기제를 확대 시행해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AI 확산을 사전에 감지하는 시스템 구축과 가금농가의 사전 신고제를 강화해 조기 감염축을 색출, 질병확산 방지 및 살처분 등 방역비용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대기축인 한우나 젖소농가 등 구제역 발생 축종에 대해 예방백신 시술 시 소농들만 공수역사가 지원했으나 시술 시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교육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관내 모든 가축사육농가(우제류 885호, 가금류 132호)에 대해 전담공무원을 지정·운영해 가축질병 발생위험도 및 위기시기와 관계없이 축사시설을 점검하고 농장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있으며 미흡농가는 부안군 방역팀에서 재점검해 시정 등 가축질병 없는 청정부안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 전라일보 [2019. 3. 14]

3

구제역·A ‘비발생 원년’ 달성 눈앞 전남도, 선제적 과감한 맞춤형 방역정책 시행

전남도는 올 겨울철 2013년 이후 6년 만에 구제역과 고병원성 A(조류인플루엔자)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 비발생 원년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3월 14일 밝혔다.

이는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방역에 대한 강한 관심과 의지, 방역 관계자 및 농가의 협력시스템이 톱니바퀴 돌 듯 기능을 잘 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영록 도지사는 평소 “구제역과 고병원성 A는 반드시 막아낼 수 있다는 방역공직자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행정과 축산농가의 협력과 역할분담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축산농가와 공직자의 협력과 소통, 마음을 다잡기 위한 결의대회를 주문, 지난해 9월 결의대회에 직접 참석해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희망 메시지를 주면서 “결실을 위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위해 밤낮과 주말도 없이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현장을 돌아보면서 빈틈없는 차단방역을 주문하고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방역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같은 기관장의 관심에 힘입어 도, 시군 방역공직자와 축산 농가는 구제역과 A를 막아보자는 높은 사기와 공감대를 가지고 씩 없는 방역활동을 펼쳤다.

국내 육지부 유일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전국 최초 백신비용 100% 보조지원 및 소규모·영세농가 접종 지원 △1월 말 경기와 충북에서 구제역 발생하자 즉시 소와 돼지 전 두수 긴급 접종 완료 △경기와 충북, 충남 위험지역 가축 반입 제한 △도내 가축시장 15개소 일시 폐쇄 △거점 소독시설 전 시군 확대 △발생상황 및 차단방역 요령 매일 9천호 문자 발송 △소독차량 160대 동원 매일 농장 및 밀집지역 소독 등 새로운 차단방역 조치를 과감히 취했다.

또한 A 비발생 원년 달성을 위해 △반복발생 및 밀집지역 50농가 휴지기제 시행 △전국 최초로



오리농장 출입구부터 울타리 둘레에 생석회 차단방역 벨트 추진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농장 20개소 앞에 방역초소 설치 △종오리 42농가, 1농가 1담당제 △계열사 역할 및 책임방역 강화 등 다른 시·도에서는 시행하지 못하는 전남만의 맞춤형 방역정책을 시행했다.

김 지사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차단방역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과거와는 비교가 안 되게 지난해 10월부터 23억 원의 방역예산을 지원했다. △생석회 2억5천만 원 △면역증강제 3억 원 △종오리 초소 설치 운영 2억 원 △농가초소 운영 및 소독약 지원 5억5천만 원 △방역초소 운영 및 면역증강제 4억2천만 원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소독약 지원 6억 원 등이다.

서은수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김영록 지사 취임이후 의지와 관심, 축산농가와 방역공직자의 소통과 협력으로 구제역과 A 등 시 비발생 원년 달성이 현실화됐다”며 “과학에 근거한 효율적 차단방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동물방역 및 축산물안전 종합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제역과 A 등 국가재난형 동물 질병은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3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2개 시·군, 방역관계기관 등과 함께 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 뉴스메이커 [2019. 3. 17]

검역본부, 전국 현장 시검사 담당자 진단역량 업그레이드

4



농림축산검역본부가 3월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시 예찰검사 담당자 59명을 대상으로 시 정밀진단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시 진단 역량 강화를 위해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실습 과목을 포함해 시 진단 표준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검역본부(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는 시 국가 예찰 및 진단 표준화를 위해 매년 시 정밀진단 전문교육 프로그램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성과 극대화를 위해 수요 파악 및 기술지원 제공 등 현장 니즈를 반영한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도 추진하고 있다.

또 진단 전문가의 기술 전수와 더불어 실제적인 실습 교육을 통한 현장 애로사항 해결 및 교육 참가자간 정보 공유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정밀진단 능력 검증을 위한 숙련도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실험실 정도관리를 추진함으로써, 시 진단 역량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 조류인플루엔자연구진단과 이명현 과장은 “앞으로도 시 진단기관과의 소통·협력을 위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과 문제해결형 교육을 추진해 신속하고 정확한 시 검사 및 진단으로 시 조기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뉴스 [2019. 3. 18]

5

전북동물시험소, 2018 시험연구사업 ‘현장솔루션’ 활용



전라북도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해 시험연구에 나선 결과를 발표하고, 축산농가 질병관리 및 축산 기술 보급 등에 연구결과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시험연구사업은 가축질병, 축산물위생 및 우량종축 생산 등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조사·연구를 통한 업무기술 개발 및 양축농가 지도에 활용하기 위해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다.

2018년 선정된 과제는 6개로 가축질병과 관련된 5개 과제(가금 3, 소 1, 토끼 1) 및 혈통개량을 위한 한우 수정란 이식에 관한 1개 과제이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농가 현장지도 시 우선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사·시험한 결과, 양계농가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및 레오바이러스에 대한 감염률 조사를 통해 일령별, 계절별 농가 방역관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 도토장에 대한 토끼 질병 감염실태 조사 및 소 큐열 발생 사례 분석을 통해 공중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인수공통전염병의 차단 및 농가 사양관리 지도에 사용될 계획이다.

축산시험장에서 발표한 '초음파화상진단기를 이용한 수정란 생산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살아있는 소에서 직접 난자를 채취하는 직접난자채취기법(OPU)의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동물시험소는 2018년도 연구사업 결과에 대해 축산 농가 교육 및 기술 지도를 통해 농가에 홍보할 예정이며 논문집 제작 및 관련 학회 연구결과 발표를 통해 전국 동물 방역, 위생기관에 공유될 예정이다.

조전기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올해도 6개 과제의 시험연구 사업을 추진해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사양관리 개선 등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밀착형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면서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생 가능성 남은 AI, 막바지 차단방역 힘써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막바지 방역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남도 창녕군 창녕읍에서 육계 8만 마리를 사육 중인 하모 씨는 계사 소독·청소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 특히 병아리 입식을 앞둔 그에게 AI 차단방역은 최대 관건이다. 하 씨는 “철새 서식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조마조마하다. 주변 농가들과 ‘조금만 더 노력하자’고 독려하며 차단방역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3월 들어 기온이 올랐지만 가금농가들은 AI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철새 북상시기를 맞아 AI 발생위험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경남 창원 주남저수지에 도래했던 고방오리가 충북 청주 미호천에서 확인되는 등 철새가 본격적으로 북상하고 있다. 이렇게 철새의 이동이 본격화하며 철새 서식지에선 AI 바이러스가 연이어 검출됐다.

4일 강원도 강릉시 남대천에 이어 5일 창녕군 우포늪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다행히 두 곳 모두 저병원성으로 판명됐다. 방역 전문가들은 철새의 이동이 활발해지는 이달이 올해 AI 발생 여부를 기밀할 고비라 보고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날이 따뜻해지는 봄철 이맘때는 방역에 소홀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실제로 2010년 이후 3월에 발생한 AI 건수는 모두 17건이나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철새가 계속 국내에 서식하고 있어 위험성이 지속되는 데다 과거사례를 보더라도 3월 발생건수가 많다”면서 “가금농가는 농장 진입로와 축사에 생석회를 도포하고 철새를 막기 위한 그물망을 점검하는 등 차단방역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 농민신문 [2019. 3. 15]

SBS 생방송투데이, 오리숯불구이&오리탕...춘천 ‘원조퇴골집’ 소개

3월 18일 저녁 방송된 SBS ‘생방송 투데이’에서는 ‘고수던’ 코너를 통해 ‘당대최고, 춘천 오리명가’ 편이 소개됐다. 강원 춘천시에 위치한 ‘원조 퇴골집 오리 숯불구이’가 이날 ‘오리 숯불구이’ 맛집으로 알려진 곳으로 서면 뿔골길(서상리)에 위치한 본점과 동면 춘천로(장학리)에서 큰딸이 운영하고 있는 분점이 있다. 3대째 내려오고 있는 이곳에서는 손님들 앞에 뜨끈한 오리탕이 먼저 에피타이저로 나와 속을 따뜻하게 해주면, 거대한 화로와 함께 석쇠가 등장한다. 숯불 위에서 오리 소금구이가 익으면서 누린내도 없이 쫄깃한 식감을 자랑하는 가운데, 곧이어 고추장 양념을 입은 오리숯불구이가 등장해 고추냉이, 부추무침, 상추쌈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 부산일보 [2019. 3. 18]

8

보은군, 농가사료구매자금 18억5,000만 원 지원

충북도 보은군은 축산농가의 사료구매 부담을 덜어 주고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올해 18억5,000만 원의 농가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

3월 17일 군에 따르면 농가사료구매자금은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용으로 사용되며 지원조건은 100% 융자에 금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농협 임직원·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 된다. 다만, 계약자 등 비정규직은 가능하다.

또 올해에는 기존 가축 전염병예방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만이 아니라 축산법, 사료관리법, 동물보호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축종 및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 원, 낙농 260만 원 양돈 300만 원, 양계 1만2000 원, 오리 1만8,000 원 등이다. 축종별 지원한도는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는 6억 원이며 사슴, 산양, 토끼 등의 기타 가축은 9천만 원까지로 영세농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사료구매자금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는 사업신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출기관의 신용조사서,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 등을 갖춰 3월 22일까지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아시아뉴스통신 [2019. 3. 17]



9

aT, “HACCP인증 컨설팅사업 신청하세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중소식품기업의 품질·위생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HACCP 인증을 포함한 품질 향상 컨설팅 지원업체를 오는 4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컨설팅 내용은 식품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HACCP 등 위생 안전인증을 포함해 품질 개선 및 디자인 분야다.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 진행되는 심층 컨설팅과 현장지도 중심인 단기 컨설팅으로 나뉘지며 선택 신청도 가능하다.

aT는 우수 컨설팅사와 전문위원 풀을 구성하고 지원업체들이 직접 전문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컨설팅의 질적 향상과 참가사들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장인식 aT농수산물유통공사지원센터장은 “HACCP 의무품목 확대 등 식품 안전 관리가 강화되는 만큼 관련 분야의 역량이 중요시되고 있다”며 “오랜 경력의 전문가 컨설팅을 시작으로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아주경제 [2019. 3. 13]

인천시, 사료구매자금 지원…축산농가 경영안정 돕는다

10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구매자금 23억4,000만 원(최대 35억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금용도는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이며 융자 100%, 금리 1.8%, 2년 일시상환 조건이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에 대해 지원된다. 단,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농가와 농협·공기업 등 관련기관 재직자, 구제역·AI 발생 농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가축분뇨 관련 법률위반 처분농가는 제외된다.

지원은 선착순으로 실제 자금이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게 되며, 선정 우선순위는 영세농, 구제역·AI 피해농가, 축산물 가격이 생산비 이하인 축종의 농가(사업대상자 선정 전월 평균 가격 기준), 동물복지형 축산농가, 청년창업농, 중규모 농가, 대규모 농가 순이다.

지원금액은 농가당 축종별 지원한도 내에서 사육규모에 따라 기존 대출 잔액을 적용하여 지원된다. 군·구별로 배정된 전체 융자지원 내에서 선착순 대출이며, 대출금은 지역 농협·축협에서 직접 사료업체로 입금되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관할 군·구에 제출하고, 군·구에서 직업, 사육두수, 대출 잔액 등 적정여부를 검토·선정하여 추천 통보서를 축산농가에 교부하고, 농가에서는 추천 통보서를 해당 군·구에 있는 지역 농·축협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에 2019년 배정된 사료구매자금은 23억 4,000만 원이나, 배정 예산의 1.5배인 35억 1,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3월까지 60%, 6월 30%, 8~10월 잔여액에 대해 연 3회 신청·선정된다.

▶ 광명지역신문 [2019. 3. 14]

경남도, 축산물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자금 지원

11

경남도는 올해 6억 원 규모의 축산물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해 국내 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식육 판매업소 2,625개소, 식육 즉석판매 가공업소 1,18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영업자이며, 올해는 재래시장 노령·영세업체를 우선적으로 30개소 선정해 축산물판매업소 위생시설개선에 소요되는 자금(최대 2,000만 원)의 60%를 무상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위생적인 축산물판매시설에 소요되는 냉동육절기, 축산물이력제 표시자울, 진공포장기, 냉동·냉장시설, 진열장, 인테리어 등의 구입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경남도는 이를 위해 지난해 (사)축산기업중앙회 경남도지회의 사업신청을 받아들여 올해 신규 사업으로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도내 축산물판매업소의 위생시설개선을 통해 국내 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소비자 신뢰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경남도민신문 [2019. 3. 19]

12

청주시, 총 50억 원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

청주시가 국제사료 곡물가격 상승으로 배합사료 가격이 급격히 올라 어려워진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가사료구매자금 총 50억 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 가축(사슴, 말, 산양, 꿀벌 등)이다. 지원조건은 100% 융자에 연리 1.8%, 2년 일시상환조건이며,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 원, 낙농 260만 원, 양돈 30만 원, 양계 1만2천 원, 오리 1만8천 원 등이다. 농가별 지원한도는 소, 양돈, 양계, 오리는 6억 원, 기타 가축은 9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 기관 재직자(계약직, 비정규직 제외), 사료를 직접구매 하지 않는 계열화 농가, 2018년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가 및 축산관계 법령 위반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료구매자금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축산업등록·허가증, 대출기관 신용조사서, 사료구매계약서, 사료구매영수증 등을 구비해 오는 27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사료자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관내 농·축협을 통해 바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시행한다. 특히 청주시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7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되며 개체단위의 관리가 가능하고 진료비용 부담이 많은 소(한·육우, 젖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키로 했다. 보장내용은 보험가입 가축에게 질병이 발생하면 이에 드는 치료비와 질병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백신접종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험기간은 1년이다. 가입 대상은 송아지의 경우 한우와 젖소 암컷은 출생일부터 7개월령 이하까지, 젖소 수컷은 출생일부터 15일령 이하까지다. 한 마리당 보험료는 10만700 원이며 보장 질병 수는 4가지다. 비육우(육성우·초임우 포함)의 경우 2만400 원이며 보장 질병 수는 8가지다.

▶ 중부매일 [2019. 3. 19]

13

제주시,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제주시는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적용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8개소를 대상으로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추진되는 사업은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축산농가로, 축산물 HACCP 교육과 사양관리 및 농장경영시스템 운용, 자체안전관리 기준에 대한 작성 및 운용 등의 내용으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HACCP 인증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8개소에 6000만 원(보조 4200만 원·자담 1800만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돼지, 젖소, 산란계, 종계, 부화장의 경우에는 개소당 800만 원, 한우, 육우, 육계, 메추리, 오리는 개소당 600만 원의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한다. 현재 축산농가 4개소에 사업비 2,800만 원(보조 1,960만 원·자담 840만 원)을 지원해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추가신청을 받아 4개소에는 3,200만 원(보조 2,240만 원·자담 1,28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헤드라인제주 [2019. 3. 13]

인제군, 축산농가 동물약품 구입비 50% 지원

인제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지역 축산농가의 동물약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군은 지역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예산 2억 원을 투입, 연말까지 인제축협과 협력 사업으로 동물약품 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 따라서 그동안 지역 한우·양돈·가금농



가에서 100% 자비로 동물용의약품과 영양제를 구입해야 했던 축산 경영 부담을 크게 덜게 됐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가축전염병 등 각종 가축 질병으로 인한 가축의 폐사와 증체량 감소 등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군은 관내 가축두수(한우·양돈) 1만두를 기준으로 연간 10억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원은 인제군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에 한해 축협에서 동물약품 구입 시 공급가액의 절반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작은 규모의 영세한 농가들이 지역 축산농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 이번 동물약품비 지원 사업이 축산농가의 실질적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CNB뉴스 [2019. 3. 19]

14

강원도,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 167억 원 지원

강원도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 167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축산업 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다. 신규 사료구매, 기존 외상금액 상환에 대한 자금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농가별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축종은 한·육우·낙농·양돈·양계·오리 및 기타 가축이다. 기타 가축에는 사슴, 말, 산양,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등이 포함된다.

강원도는 축산업의 시대적 요구에 걸맞은 정책을 위해 영세농가,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피해농가,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농가, 청년창업농가 등에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축산 농가는 이번 달부터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시·군에서 사육두수, 대출 잔액 등을 검토한 '사료구매자금 추천서'를 발급받으면 지역 농·축협에서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강원도 농정국은 “상당수 농가들이 외상거래를 통해 상대적으로 비싼 사료를 구매하고 있다”며 “사료구매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해 도내 축산농가가 현금거래 등으로 현재보다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하고, 사료비 부담이 완화돼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민중의소리 [2019. 3. 14]

15